

◆ 24년 6월 고1 26~30번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의 효력이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힘을 의미한다. 이때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 ④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을 의미한다. 실효성이 없는 법은 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⑦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을 갖춘 법이 미치는 범위는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의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만약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⑥ 경과되면 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은 소멸한다.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구법

의 효력이 소멸된다. 법의 효력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며 ⑤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을 ④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이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의 인적 효력은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 어떤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관계 없이 국적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경우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황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한다면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속지주의로 보완할 수 있다.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주한 외교 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⑥ 면책 특권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의 장소적 효력은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인 영토, 영해, 영공에 걸쳐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중 일부 조항처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다.

* 공포: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법의 효력은 국가 영역의 일부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 ② 법의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을 폐지할 수 없다.
- ③ 법의 효력은 부칙에 시행일을 반드시 규정해야 발생한다.
- ④ 주한 외교 사절은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더라도 타국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27. ⑦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이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 ② 법이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없으면,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정당한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 ③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해당 법의 실현을 위한 강제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 ④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 ⑤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더라도, 법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힘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28.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⑧~⑩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짹지은 것은?

<보기>

음주가 허용된 나라인 A국 국민 ○○씨가 음주가 금지된 B국에서 음주를 한 경우, ⑧에 따르면 ⑨의 법을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씨는 ⑩.

* 단, ○○씨는 A국에서 B국으로 파견된 외교 사절은 아님.

	⑧	⑨	⑩
①	속지주의	A국	처벌받을 것이다
②	속지주의	B국	처벌받을 것이다
③	속지주의	B국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④	속인주의	A국	처벌받을 것이다
⑤	속인주의	B국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기업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2016년 6월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1990년 1월에 제정된 관련법은 별도의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 행위 종료일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1일에 공포된 후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되었고, 효력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 ① 구법의 효력은 개정된 법의 시행일로부터 소멸했겠군.
- ②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2021년 7월에는 부과할 수 없겠군.
- ③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면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개정된 법이 공포된 시점에는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구법의 효력이 존재했겠군.
- ⑤ 법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2016년 6월에 △△기업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었겠군.

30. ⑪~⑬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⑪: 법규에 맞음.
- ② ⑫: 시간이 지나감.
- ③ ⑬: 어려운 점을 무릅쓰고 행함.
- ④ ⑭: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 ⑤ ⑮: 책임이나 책임을 면함.

◆ 10년 3월 고1 31~35번

[31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 없이도 살 사람’들만 모여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가 법 없이 살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①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강제적인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강제성을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이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려면 법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에 ⑥ 적용하는 과정은 이른바 ‘법률적 삼단논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률적 삼단논법’이란 추상적인 법 규정은 대전제로, 구체적인 사건은 소전제로 놓고, 법 규정이 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의 노트북 컴퓨터를 B가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다 발견되어 A가 B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하자. ⑦ 검사는 이 사건이 어떤 법 규정에 ⑨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법정에서 B의 행위가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규정에 해당되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⑩ B의 변호사는 B가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간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려고 했던 것이므로, 검사가 내세운 형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사와는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러면 법관은 양쪽의 주장을 참고하여 B의 행위가 과연 검사가 내세운 형법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관은 그에 맞는 결론, 즉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와 같이 검사, 변호사, 법관은 모두 ‘어떤 사건이 어느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다룬다.

그런데, 많은 훈련을 거친 법률가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적당한 법 규정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기존의 법 규정도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운 법 규정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 규정이 여러 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만일 이와 같이 어떤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형법에서는, 법률에 미리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관은 법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함부로 다른 형법 규정을 가져다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다.

반면, 기본적으로 ⑪ 대등한 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재판에서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판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사건과 관련된 일반 원칙을 찾아내서 손해와 이익을 공평하게 ⑫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즉, 법 규정 찾기에 실패해도 관습법이나 전통한 상식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하다면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 형사재판: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다루는 재판.

* 민사재판: 개인 사이의 경제적·신분적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

31. 위 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법이다.
- ② 동일한 사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 규정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 ③ 많은 훈련을 거친 법률가들도 때로는 법 규정 찾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 ④ 민사재판에서는 관습법이나 전통한 상식도 판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⑤ 형사재판에서는 적당한 법 규정이 없으면 법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판결을 미룬다.

32. ⑦과 ⑩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⑦만 법률적 삼단논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 ② ⑩만 법률적 삼단논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 ③ ⑦과 ⑩이 대전제를 서로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 ④ ⑦과 ⑩이 소전제를 서로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 ⑤ ⑦이 자신이 세운 대전제를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33.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을’로부터 ‘병’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병’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갑’과 ‘을’ 모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법률이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갑’이 이를 이용한 행위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① ‘갑’은 도덕적인 비난을 면할 수 있겠군.
- ② ‘을’은 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겠군.
- ③ ‘병’이 ‘갑’에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겠군.
- ④ 대법원은 ‘갑’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세운 대전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군.
- ⑤ 앞으로 ‘갑’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법 규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군.

34. 위 글로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담긴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② 명백한 범죄행위는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 ③ 법을 적용할 때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④ 법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다.
- ⑤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35. ①~⑤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② 분쟁(紛爭) :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
- ② ⑥ 적용(適用)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
- ③ ④ 해당(該當) :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
- ④ ④ 대등(對等) : 서로 견주어 높고 낮음이나 낮고 못함이 없이 비슷함.
- ⑤ ⑤ 조정(調停) :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림.

◆ 14-6평 A형 28~29번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의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 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 고리까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한다. 곧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2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 ②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인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라고 본다.
-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 ④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⑤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다음은 어느 공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자연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 ①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 시켜 주려 한 것이다.
- ②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 과학적 연결 고리가 존재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③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들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 ④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 ⑤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회사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 14-9평 A형 22~25번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하였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할 사람들 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⑦ 공동 소송을 하여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갑과 같은 이를 선정 당사자로 삼아 그에게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어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만 배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집단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소송의 개시가 쉽지만은 않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 단체가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 소송은 공익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최근에 ⑧ 우리나라로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었다.

22.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 ② 대립하는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하였다.
-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⑤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였다.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②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 ③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지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 ④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24. ⑦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②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고자 한다.
- ③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 ④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⑤ 개인 정보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25. ⑧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 못하고 폐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④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폐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⑦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⑧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 16 수능 A형 27~30번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⑧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⑨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⑩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8. ⑦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관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30.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⑤: 수취하였다
② ④: 부가하는
③ ③: 지시한다
④ ④: 형성되었을
⑤ ②: 경유하여

◆ 09 MDEET 언어추론 38~40번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샤일록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삼천 두카트의 돈을 받지 않고 1파운드의 쪽은 살점을 원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겠죠. 소인의 기질 탓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면서 그들을 당나귀, 개, 노새들처럼 비참하고 천한 일에 혹사하죠. 그들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답하겠지요. “노예는 나의 소유물이다.” 소인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인이 요구하는 1파운드의 살점은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소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베니스 법령은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것이 됩니다. 소인은 법률을 요구합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포서 그렇군. 약속 날짜가 지났군. 베니스의 어떤 권력으로도 정해진 법률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샤일록의 주장은 법적으로 흠이 없는 정당한 요구이다. 자, 이제 살을 떼어 넬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도려내는 살점은 정확히 1파운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 저울이 머리 카락 한 올만큼만 기울더라도 그대는 사형이다. 그리고 전 재산을 압수한다.

‘나는 법률을 요구한다.’ 샤일록은 이 한마디로 법과 권리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의미를 어떤 법철학자보다도 더 적절히 표현하였다. 그의 권리 주장에서 비롯된 한 개인의 사건은 곧바로 베니스의 법률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 위의 말을 할 때 샤일록의 모습은 얼마나 힘차고 당당했을까. 1파운드의 살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제 단순히 한 사람의 유태인이 아니며,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베니스의 법률에 자체이다. 그의 권리가 베니스의 법률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⑦ 비열한 술수로 권리를 좌절시키는 판결에 샤일록이 무너졌을 때 베니스의 법률도 함께 쓰러졌으며, 법정에서 내몰린 사람은 유태인 샤일록이 아니라 법을 향해 외친 사회적 소수자 샤일록이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위에서 보듯이 결과도 불확실하고 값비싼 대가가 예견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당사자들을 보게 된다. 소송에 따르는 회생, 비난, 번거로움은 이미 권리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까닭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인 침해에 따른 도덕적 고통 때문이다. 그의 목적은 물건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내면의 소리는 그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물건이 아니라 인격, 명예, 법 감정, 자존심 등을 위해 소송하라고 외친다. 간단히 말해 그에게서 소송은 단순한 이익의 문제에서 인격 문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권리 침해에 저항하기보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한다. 그들에게는 수고스럽게 주장해야 할 권리보다는 오히려 평온이 더 나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가?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과 기질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소송을 좋아하며 또 어떤 이는 평화를 선호한다. 권리의 입장에서 볼 때 둘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은 권리의 주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권리자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가 일반화되면 결국에는 권리가

소멸하고 말 것이다. 법과 권리는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서 불법에 대해 용감히 저항하도록 요구하지만, 위의 견해는 불법으로부터 비겁하게 도피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권리의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는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38. 위 글에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② 권리의 행사에 게으른 사람은 권리로 누릴 자격이 없다.
- ③ 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로 추구해야 한다.
- ④ 권리의 실현에서 이익과 인격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⑤ 평온을 선호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39. 포서가 판결에서 행한 ⑦ ‘비열한 술수로 권리’를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 ① 증서에 쓰여 있는 정당한 권리의 내용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테도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② 피 없는 살은 없으므로 살을 떼어 넬 권리에는 피까지 포함되는 테도 피를 제외하라고 선고하였다.
- ③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는데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④ 권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약속 날짜가 지났다는 것을 들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 ⑤ 사람의 살점은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 원칙을 무시하고 판결하였다.

40. 글쓴이가 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동결 약속과 달리 등록금이 오르자, 학생들이 인상분에 대하여 날부 거부 운동을 하였다.
- ②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합의를 권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다.
- ③ 인근의 토지 소유자가 그 땅에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헛별이 안 든다고 시위를 벌였다.
- ④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한테 채무가 있는지 모르겠으니 임종이 있어야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 ⑤ 액수가 매우 적은 사건의 소송에서 복잡한 과정을 면해 주고자 법관이 그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지만, 원고는 거절하였다.